

주간 통일정세

2015-34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 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남한보다 3분 빨리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 발표(8/25, 조선중앙방송, 연합뉴스)
 - 조선중앙방송은 25일 오전 2시 정각 “내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22일 관문점에서 열린 북남 고위급 긴급접촉이 24일에 끝났다”고 긴급 보도함.
 - 방송은 “북과 남은 접촉에서 군사적 대결과 충돌을 막고 관계발전을 도모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면서 6항으로 이뤄진 공동보도문 전문을 소개함.
 - 방송은 1항으로 남북이 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을 평양 또는 서울에서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고,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힘.
 - 이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2항, 25일 정오부터 남측의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3항도 잇따라 전함.
 - 또한 4항에서는 “북측은 ‘동시에’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준전시상태 해제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시점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반면 남측은 고위 당국자 접촉에 참석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타결 소식을 전해 북한보다 3분 늦은 25일 오전 2시 3분부터 발표를 시작했으며 북측과 달리 남측 발표문에는 ‘동시에’라는 문구가 없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참수작전·작계5015는 위험천만한 도발 망동”(8/28,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8일 논평에서 “지금 남조선 언론들에는 참수작전이니 작전계획 5015니 하는 것이 대대적으로 유포되어 내외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보도함.
 - 또한 “공동보도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상대방의 수뇌부를 노린 전쟁 각본을 버젓이 언론에 공개한 것은 북남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이며, 겨레의 통일 열망을 짓밟는 참을 수 없는 모독 행위”라며 비난함.

- 매체는 전날인 27일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북남 관계의 급속한 발전을 달가와하지 않는 세력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을 들면서 “북남 합의를 뒤집어엎으려는 세력들이 다시 준동하기 시작했다”고 핏대를 세워 비난함.
- 조선신보 “남한 진정성 보이면 남북관계 급진전될 것”(8/29,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9일 ‘최고위급에서 표명된 북의 확고한 관계개선 의지’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남북 합의의 의의를 강조한 것은 상당히 무거운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그만큼 강한 의지가 있고 사태 발전을 낙관할 수 있는 담보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함.
 - 그러면서 “남측 당국이 판문점 마라톤 협상에서 발휘한 열의와 진지성을 잃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급진전될 수 있다”고 역설함.
 - 조선신보는 그러나 “합의가 마련됐다고 해서 반드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며 “내외정세를 관리하고 대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데는 보수세력에 지지기반을 두고 미국과 대화할 기회도 가지는 남측 대통령의 각오와 수완이 관건으로 되어나갈 것”이라고 지적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北 지뢰도발 유감표명…南 대북확성기방송 중단(8/25, 연합뉴스)
 -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초래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황을 논의하는 남북 고위급 접촉이 25일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이번 합의에 따라 북한은 지뢰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준전시상태를 해제하는 한편, 남한은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키로 해 북한의 잇단 도발로 최고조에 달했던 군사적 긴장 상태가 완전해소 국면에 들어갔다고 전함.
 - 또한, 남북은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추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 개최 ▲민간교류 활성화 등에도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해빙국면을 맞을 전망이라고 보도함.
 - 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 최고위급 접촉인 이번 협상에는 남측에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선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참석했다고 뉴스는 덧붙임.

- 북한 황병서 “관계개선 새 분위기 마련…다행스러워”(8/25, 연합뉴스)
 - 25일 타결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에 북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이날 조선중앙TV에 직접 출연해 이번 접촉에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마련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황 총정치국장은 “우리는 이번에 공동의 노력으로 북남관계 개선의 새로운 분위기를 마련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남측 당국이 이번 북남 고위급 긴급 접촉에서 이룩된 합의정신을 진지한 자세로 대하고 그 이행에 적극 나섬으로써 북남관계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고 전함.
 - 또한 그는 “이번 북남 고위급 긴급 접촉에서 이룩된 합의는 북남 사이의 군사적 대결과 충돌을 막고 긴장을 완화하며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원칙적인 투쟁과 성의있는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함.

- 북한 김양건 “북남관계, 통일 지향 건설적 방향으로 나가야”(8/27, 조선중앙통신)
 - 김양건 비서는 27일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과 관련한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을 받고 “북과 남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에서 고위급 긴급접촉을 가졌다”면서 이렇게 답변했다고 보도함.
 - 김 비서는 “북과 남은 이번 접촉에서 이룩된 합의정신을 귀중히 여기고 극단적인 위기를 극복한데 그칠 것이 아니라 북남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남북, 내달 7일 적십자 실무접촉 판문점 개최 합의(8/29, 연합뉴스)
 - 남북은 29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내달 7일 판문점에서 갖기로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우리 정부는 28일 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안하는 김성주 총재 명의의 통지문을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강수린 위원장 앞으로 보냈으며, 북한은 하루 만인 29일 오후 1시께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7일 판문점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남측에 전달했다고 뉴스는 전함.
 - 통일부는 “적십자 실무접촉과 관련해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은 앞으로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를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함.

라. 대남 군사 관계

- 北, 핵심 3대 침투전력 모두 나왔다…‘준전시상태 매뉴얼 적용’(8/24,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20일 준전시상태를 선포한 이후 북한군의 핵심 3대 침투전력이 모두 소속 기지를 떠나 전방 등으로 전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연합뉴스는 보도함.
 - 24일 북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군은 준전시상태 선포 이후 평안북도 철산군의 모기지에 있던 공기부양정 10여 척을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쪽으로 60여km 거리의 고암포로 전진 배치했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은 나머지 침투전력인 잠수함 50여 척을 한미 감시망에서 벗어난 수중으로 전개했으며 일부 정예 특수부대 요원을 대북 확성기 방송 타격 등을 위해 전방지역으로 전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함.
 - 또한 북한군은 준전시상태 선포에 따라 전투기 등 공중 전력을 격납고인 ‘이글루’로 옮기고 일부 기종은 비행기지를 바꿔 전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함.
- 한미 감시망 벗어났던 北 잠수함 기지 복귀 식별돼(8/25, 연합뉴스)
 - 동·서해 잠수함기지를 이탈해 한미 감시망을 벗어났던 북한 잠수함 50여 척 가운데 일부가 소속 기지로 복귀하는 징후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군의 한 관계자는 25일 “지난 21일부터 기지를 이탈했던 50여 척의 북한 잠수함 중 일부가 소속 기지로 복귀하는 징후가 포착됐다”면서 “이번에 복귀가 식별된 잠수함은 북한의 내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남북 사회 관계

-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단도 최소인원 남기고 귀경(8/2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의 서부전선 무력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단 남측 단원들이 최소인원만 남기고 귀경했다고 24일 보도함.

-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남북공동발굴단 소속 남측 인원 10명 중 5명이 지난 주말 입경했다”면서 “상황이 엄중한 만큼 필수인원만 남기고 입경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고 뉴스는 전함.
- 한적, ‘추석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 준비 착수(8/25, 연합뉴스)
 - 남북이 25일 공동 보도문에서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9월 초에 가지기로 하였다”고 발표한 이후, 한적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태스크 포스를 곧바로 구성, 실무작업에 착수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한적은 적십자 실무회담을 북측에 제의, 9월 초에 만나 상봉 날짜와 방법, 상봉자 수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뉴스는 전함.
- 평양 유소년축구 참가 선수단 귀국…‘긴장했지만 문제없었다’(8/25, 연합뉴스)
 - 평양 국제 유소년(U-15) 축구대회에 출전했던 우리 선수단 68명이 중국을 거쳐 25일 오후 8시께 인천공항으로 무사히 귀국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대회 기간인 지난 20일 북한군의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남북한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라 우려를 낳았지만 우리 선수단은 경기 일정을 별 탈 없이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스는 전함.
 - 대회에 참석한 경기도 관계자는 “20일 환영 만찬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북측 관계자가 남북 긴장 상황을 설명하며 경기에 참여할지 의사를 물었다”며 “정부로부터 ‘조기에 철수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받아 긴장은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함.
- 경기도, 北에 국제 유소년축구대회 10월중 개최 제안(8/27, 연합뉴스)
 - 경기도 관계자는 27일 “평양에서 열린 2차 대회 기간인 지난 23일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관계자를 만나 3차 대회 개최를 비롯한 5개 남북교류사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27일 보도함.
 - 뉴스는 오는 10월 중 경기지역에서 3차 대회를 열고 내년부터는 봄 중국, 여름 북한, 가을 한국 개최 등 1년 단위 대회 일정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 ‘채널A·MBC 보도’(기부금제도를 내오기 위한 정령, 충성심을 돈으로 등) 관련 ‘발표된 적 없는 정령’이라며 ‘공화국의 인민적 시책에 대한 비방 중상은 괴뢰보수언론들의 악습이며 생존방식’이라고 비난 및 ‘모든 죄악에 대한 결산의 마당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고 위협(8.24, 중앙통신)
- 최근 우리 언론의 보도(北 기부금제도 정령 발표 등) 관련 ‘신성한 정치체제와 인민의 총정에 대해 함부로 지껄어댄 모든 죄악에 대해 반드시 결산할 것’이라고 연일 위협(8.27, 평양방송)
- 北, ‘남조선에서 마약범죄가 날로 성행하고 있다’고 연합뉴스 인용 보도(8.30, 중앙통신)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한반도 전쟁 위험 장본인은 미국”(8/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정세론 해설’을 통해 “조선반도에 오늘과 같이 위험천만한 최악의 사태를 몰아온 장본인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은 평화와 안전 보장의 기본 장애”라고 주장함.
 - 신문은 “미국은 남조선 군부호전광들과 야합해 침략적인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았다”며 특히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지목해 거세게 비난함.
 - “미국이 핵전략 타격수단인 핵전략폭격기, 핵잠수함, 핵항공모함들을 수시로 조선반도에 끌어들이 불의의 핵 선제타격연습을 벌리는 조건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쟁억제력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특이사항 없음.

마. 대중국

- 북한, 中 항전기념행사에 최룡해 파견(8/25, 연합뉴스)
 - 8월 3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중국의 항일전쟁 승전 70주년 기념 행사에 북한이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참석시키기로 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이어 중국 군당국은 25일 국무원 신문관공실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열병식에는 11개 국가가 군대를 파견하고 31개 국가가 참관단을 파견한다”고 밝히고 관련 명단을 공개했지만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함.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북한 공훈국가합창단, 전용기 타고 러시아 방문…‘협력 강화’(8/2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유명 악단 중 하나인 공훈국가합창단이 전용기를 타고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함.
 - 이어 지난 7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나서 창단한 경음악단인 ‘청봉악단’의 주요 배우들도 함께 러시아로 떠났다고 덧붙임.
 - 통신은 김기남 당 비서, 박춘남 문화상, 김의순 당 부부장, 궁석웅 외무성 부상, 김진범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북러 친선의원단 위원장인 홍서헌 김책공업 종합대학 총장 등이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이들을 전송했다고 전함.
- 유엔제재 북한 선박, 러시아 수시로 드나들어(8/29,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제재를 받는 북한 해운업체 소속의 선박들이 이름을 변경해 러시아에 수시로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함.
 - 방송은 미국의 북한전문 인터넷 매체인 NK뉴스를 인용해 국제 제재를 받는 업체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인 ‘희천’호가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러시아의 바니노항에 입항한 사실이 국제해상교통의 인터넷 운항정보에 기록됐다고 전함.
 - 미국의 제재 관련 전문가는 “러시아 정부가 유엔 제재에 따라 입항금지 또는 자산동결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고 방송은 전함.

아. 국제기구

- 특이사항 없음.

자. 기타 국가

- 특이사항 없음.

- 제2회 국제 유소년 U-15 국제축구대회, 8.21~24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 (8.24, 중앙통신)
-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 관련 '미국의 대조선정책의 최종목표는 우리(北)의 제도전복이며 영토강점'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절대로 허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충고 및 '끝끝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대재난과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위협(8.24, 중앙통신·노동신문)
- 美 인터넷 홈페이지 '워싱턴 프리비컨'에 실린 6·25전쟁 당시 많은 민간인들의 피해 글을 거론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떠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세계 최대의 인권유린국'이라고 비난(8.24, 중앙통신)
- 日 수상 아베의 담화(8.14) 관련 '성근하게 사죄하지 않은 속심은 과거청산을 영원히 회피하고 과거 실현하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 야망을 기어이 실현해 보려는 데 있다'고 비난(8.24, 평양방송)
- 일본군 해군수송선 '우키시마마루호' 사건 70주년 관련 '일본은 오늘까지도 과거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책동에 광분하고 있다'며 '죄 많은 과거사를 사죄하고 배상할 것'을 촉구(8.24, 중앙통신)
- 김영남, 8.24 작별 방문한 駐北 나이지리아 대사와 담화(8.24, 중앙통신)
- 駐北 중국대사관 국방무관 장평, 8월 24일 '선군절' 즈음 김정은에게 보내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박영식(인민무력부장)에게 전달(8.24, 중앙통신)
- 김태섭 駐파키스탄 北대사, 8월 21일 同國 대통령에게 신임장 전달(8.24, 중앙방송)
- 北, '악의 제국 미국이 세계의 면전에서 인권재판관으로 행세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함부로 심판하려고 하는 것은 신성한 인권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하며 '세계평화애호 인민들은 미국을 역사의 심판대 위에 끌어내어 준엄한 철추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8.25, 중앙통신·민주조선)
- 미국의 '韓·일에 첨단무기 판매(이지스전투체계 對日 판매 등)·이전 및 배치계획'은 "조선반도 정세의 긴장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히 위협 당한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비난(8.26, 중앙통신·노동신문)
- 日 정객들의 8월 15일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지난날의 제국시대를 부활시키려 것"이라고 비난하며 '일본의 과거와 결별'을 촉구(8.26, 평양방송)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8월 26일 주북 크로아티아 대사(네보이샤 코하로위츠) 신임장 접수(8.26,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과 러시아, 광복(8.15) 70주년을 즈음하여 공동우표 발행(8.28, 중앙통신)
- 제1차 일본의 침략역사 왜곡과 관련한 국제학술토론회, 8월 29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및 사회과학원·김일성종합대학 등 사회과학-교육부문 교원-연구사들과 중국의 여러 대표단-대표들 참가(8.29, 중앙통신)
- 北 여자축구팀, 8월 29일 '2015년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U-19 선수권대회' 對일본팀과 결승경기 결과 2위(승부차기) 및 2016년 국제축구연맹 20살 미만 여자월드컵 참가자격 획득(8.30, 중앙통신)
- 일본의 '과거청산'을 촉구하며 "과거청산문제는 단순히 조일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과 관련된 예민한 정치적 문제"라고 강조(8.29,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쿠바 외교관계 수립(1960.8.29)' 55주년 관련 '반제자주, 사회주의 고수 연대성' 표명 및 '쿠바의 정치·경제 등 소개와 北-쿠바 친선협조 강화' 강조(8.29, 중앙방송·노동신문)
- 北 보건의료대표단(단장: 강하국 보건상), 8월 29일 세계간염수뇌자회의 (영국)·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총회 제68차 회의(동티모르) 참가차 평양 출발(8.29, 중앙통신·중앙방송)
- 아태지역에 美항공모함 배치 움직임 관련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항시적으로 조성하고 우리(北)를 기어이 힘으로 압살해 보려는 책동이 노골적 단계에 들어섰다'며 '무너져가는 저들의 지배체계를 부지해보려는 단말마적 발악'이라고 비난(8.30,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北-日 체육대학들, 8월 30일 '학술 및 체육교류에 관한 협정' 조인 (8.30, 중앙통신·중앙방송)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일부 위원들 전격 해임(8/28, 연합뉴스,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28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과 총정치국,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내각 간부와 군단급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함.
 - 연합뉴스는 이번 회의가 교전 직전까지 치달았던 정세 속에서 북한이 취한 조치와 집행과정 분석을 통해 국가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를 마련하고 나선시 홍수피해 복구대책을 논의하고 인사 개편을 단행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라고 보도함.
- 북한, 김정은까지 나서 남북관계 개선 '합의 이행' 강조(8/28,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김정은 제1위원장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타결된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함.

- 이어 이번 합의를 “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과국에 처한 남북관계를 화해와 신뢰의 길로 돌려세운 중대한 전환적 계기”로 평가했다고 전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북한, 광범기 당비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8/30,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북한의 대표적 경제관료인 광범기 당비서도 노동당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조선중앙TV는 30일 사리원시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 제막식 소식을 전하면서 행사에 참가한 광범기 당비서를 최룡해·최태복 당비서와 함께 정치국 위원으로 호명함.
 - 광범기 당비서는 김일성종합대 출신으로 내각 부총리, 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 계획재정부 부장,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 위원장,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대표적인 경제 관료라고 연합뉴스는 전함.

다. 공식 행사

-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 준비(8/27, 연합뉴스)
 -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거행할 예정인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27일 포착됐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연합뉴스가 27일 구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은 평양 미림비행장에 포병 장비와 장갑차 등 수송 장비로 추정되는 장비들을 집결시킨 채 열병식을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전함.
 - 또한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미림비행장에 스커드와 노동 등 각종 미사일, 240mm 방사포 등 포병 장비, 장갑차 등을 동원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덧붙임.
- 북한, 해군절 맞아 ‘잠수함 탄도탄’ 발사 성공 선전(8/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공격형 잠수함에서의 탄도탄 수중발사 성공으로 오늘 우리

해군 무력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군절’을 맞아 해군 무력 현대화를 뽑내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향한 충성을 강조함.

- 신문은 ‘전략잠수함 탄도탄’(SLBM) 수중발사 시험에 대해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린 것에 못지 않은 또 하나의 경이적인 성과”라고 찬사를 보냄.
- 신문은 이어 “몸소 어뢰정에 오르시어 해병들과 함께 과도 세찬 항해길을 헤치시며 우리 식의 해군 전법도 밝혀주시고 해군 무력의 현대화를 위해 끝없는 노고와 심혈을 바친”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독려함.

■ 북한, 사리원시에 김일성·김정일 동상 세워(8/3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이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세워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함.
- 통신은 사리원시에서 전날 동상 제막식이 열렸다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기남·최룡해 당 비서, 관계부문 일꾼 등이 참가했다”고 밝힘.
- 김 상임위원장은 제막사에서 “동상을 모신 것은 수령님들의 혁명생애와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 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특기할 역사적 사변”이라고 의미를 부여함.

라. 주요 기관 행위

■ IAEA보고서 “북한, 영변에 경수로 배전시설 건설중인듯”(8/27, 교도통신)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최근 정리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경수로의 배전(配電)용으로 보이는 시설을 건설중이라고 소개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함.
- IAEA는 직전 보고서를 낸 작년 9월 이후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비를 계속 진행하고, 새로운 건설작업도 개시했다며 북한 핵개발은 “우려해야할 사태”라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함.
- 이어 북한이 핵무기 원료를 만드는 핵심 공정인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원심분리기가 있는 건물의 부지 면적을 배로 확대하고, 건물을 사용한 징후도 확인됐다고 IAEA는 소개했다고 전함.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전투준비 끝났다”…북한, 주민들에 전쟁 분위기 고취(8/24, 연합뉴스)
 - 남북 고위 당국자 2차 접촉이 24일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관영 언론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주문하고 나섰다
 - 연합뉴스는 보도함.
 - 뉴스는 조선중앙TV가 이례적으로 24일 오전 9시부터 방송을 내보내며 북한 주민들에게 ‘전쟁불사’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일반적으로 평일에는 매일 오후 3시에 방송을 시작한다고 전함.
 - 조선중앙TV의 24일 방송 프로그램을 순서를 보면 ‘병사들의 친어버이’, ‘한치의 땅도 내어주지 말라’, ‘개천광장에 메아리친 환호성’ 등 전쟁 분위기로 몰고가는 기록 영화와 특집물로 가득 찼다고 전함.
 - 특히 남한에 사재기가 만연하고 병사들이 탈영을 한다는 등 황당한 보도를 했던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TV는 이번엔 우리의 대북 심리전 확성기를 조준하는 인민군 영상을 방영하며 대남 적개심을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임.

- 북한, ‘선군절’ 55주년 맞아 김정은에 충성 촉구(8/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5일 1면부터 4면까지 선군절과 관련된 사진과 글을 실으며 의미를 크게 부각하면서 ‘선군절’을 맞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 정신’을 강조하고 이를 이어받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전 주민에 촉구함.
 - 신문은 1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신 사진과 함께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아가자’라는 사설을 실고, 선군 정신을 통해 “수십 년 전쟁을 모르고 살아왔고 사회주의 경제강국, 문명국 건설에 기적을 창조했다”고 역설함.
 - 또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새해 첫날 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을 찾은 데 이어 병진노선을 제시한 것은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선군의 기치 높이 이 땅 위에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신념과 의지의 선언”이라며 김정은 체제의 정통성과 그에 대한 충성을 강조함.

- 북한, 청년절 맞아 젊은 세대에 ‘수령 옹위’ 강조(8/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2면 사설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청년들을 혁명의 강력한 전위

- 대오,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웠다”며 청년절의 의미를 선전함.
- 이어 “지금 제국주의 반동들은 온갖 부정의와 탐욕으로 우리 청년들을 변질시키려고 한다”며 “청년들은 원수님을 단결의 유일 중심으로 높이 받들며 철통같은 일심 단결의 위력으로 백두의 행군길을 곳곳이 이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함.
 - 또한 “청년들은 우리 당의 사회주의 문명국, 체육강국 건설 구상을 앞장에서 받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국가 발전을 위한 청년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함.

- 김‘선군절’ 55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8월 24일 4.24문화회관에서 진행(8.24, 중앙방송·평양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과학기술전당 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8.27, 중앙방송)
- ‘北, 불력불가담(비동맹회의)운동’ 정회원국 가입(‘75.8.25) 40주년 관련 ‘성원국으로서 운동의 확대발전과 승리적 전진 노력 自評 및 운동의 강화발전과 새 세계건설투쟁’ 강조(8.26,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은 黨 제1비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자들에게 선물 전달(8.28, 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8월 30일 故 문선명(통일교 前 총재) 3주기 즈음 유족들에게 ‘조전’ 전달 보도(8.30, 중앙방송·중앙통신)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북한, 국제사회 지원 수혜 30위…지원액 감소세(8/27,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올해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인도주의 지원 규모가 전세계 지원대상국 가운데 30위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함.
 - 영국 민간단체 ‘개발 이니셔티브’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올해 계획한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금이 1인당 10달러로 전체

지원대상국 가운데 30위이며, 지원 규모는 북한이 대규모 홍수 피해를 입은 2012년 이후로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 전함.

- “북한 고려항공, 4년 연속 세계 최악 항공사”(8/28, 미국의소리)
 - 영국의 항공서비스 전문 조사기관인 스카이트랙스는 전세계 600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고려항공에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인 별 1개(최고등급은 별 5개)를 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함.
 - 스카이트랙스는 고려항공에 대한 자세한 평가 내역은 공개하지 않은 채 “별 1개를 받은 항공사는 평가 영역 전반에 걸쳐 형편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고 매체는 전함.

라. 대외 경제 관계

- 북한 대외경제상, 내달 방러…남북 장관급 회동 주목(8/24, 스푸트니크방송)
 - 러시아 스푸트니크방송은 24일 리룡남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이 블라디보스토크시가 주도하는 ‘신(新) 프로젝트 협력’ 논의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다고 보도함.
 - 방송은 리룡남 대외경제상이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러시아 극동개발장관과 회동 하는데 이어 한반도 3국 협력 논의를 위해 남한 및 러시아 관계자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함.
 - 방송은 이어 “이번 동방경제포럼을 통해 북한이 야금, 교통 인프라, 에너지 및 천연자원 뿐 아니라 교육, 과학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러시아와 공동 이익을 취하는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고 소개함.
- 국제적십자사, 북한 수해복구에 2억 5천만원 긴급지원(8/24, 미국의소리)
 - 국제적십자사가 홍수 피해를 당한 북한에 수해복구 특별지원금 21만 달러(약 2억 5천만원)를 긴급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 보도함.
 - 이 지원금은 수해를 크게 입은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 지역 900여 가구, 주민 3천541명의 임시 거처 제공과 구호품 전달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방송은 전함.
 - 또한 방송은 국제적십자사가 “조선적십자회와 12~14일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재민들은 집을 잃어 임시 거처나 공공건물에서 지내고 있고, 식수와

위생시설, 위생용품 등이 부족해 수인성 질병에 걸릴 위험도 커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임.

- 스웨덴, 북한 장애인 사업에 3억 6천만원 지원(8/25, 미국의소리)
 - 스웨덴 정부가 북한 장애인 재활과 특수학교 교사를 돕기 위해 30만 달러(약 3억 6천만원)를 지원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5일 보도함.
 - 방송은 스웨덴 정부는 이 지원 사업을 국제 장애인 구호단체 '핸디캡 인터내셔널'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함.

- “미국 NGO, 북한에 6억원 상당 의료용품 지원”(8/26, 미국의소리)
 - 미국 민간단체 아메리카어스(AmeriCares)의 도나 포스트너 대변인은 26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화 50만 달러(한화 약 6억원) 상당의 지원 물품이 오는 10월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힘.
 - 물품은 항생제와 심혈관 관련 의약품, 임산부를 위한 비타민제, 유아용품, 겨울용 모자와 장갑 등으로 평양, 평안도, 황해북도의 병원과 보건소 6곳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덧붙임.

- “북한 건설노동자 108명 카타르서 강제 추방돼”(8/26,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6일 카타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CDC가 북한 건설노동자 108명에 대한 해고와 강제 추방을 지난 7월24일 북한 건설회사 사장에게 최종 통보했다”며 “추방 시한은 8월1일 이전”이라고 보도함.
 - 이에 따라 CDC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은 지난달 26일 35명, 30일 38명, 8월 1일 35명 등 세 차례로 나눠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전함.

- “네덜란드 기지단, 내달 방북…금강산 투자전망 취재”(8/27, 자유아시아방송)
 - 네덜란드의 투자자문업체인 GPI컨설턴시의 폴 치아 대표는 27일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RFA)에 “다음달 네덜란드 기지단을 이끌고 마식령 스키장과 원산 인근 국제 관광지대를 방문한다”고 밝힘.
 - 치아 대표는 “북한이 관광특구에 호텔, 음식점, 선박 등 70여 가지 사업을 제안했다”며 “이번 방북에서 9월 21~24일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리는 제11회 평양가을국제상품전람회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함.

- 이어 “네덜란드에는 북한 관광을 담당하는 여행사가 5곳이나 되는 등 북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10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대북 무역토론회, 11월 네덜란드에서 대북투자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북한 산림전문가, 남한정부 지원으로 독일서 연수(8/29, 미국의소리)
 - 북한 산림 전문가 30여 명이 한국 정부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지원을 받아 독일에서 산림복구 연수를 받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9일 보도함.
 - 지난달 7월에 열린 첫 운영위원회에서는 북한 등 FAO 회원국 중 산림경관 복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나라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 선정을 논의하고 2015~2016년 작업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고 설명함.
 - 전범권 FAO 산림정책관은 “FAO에는 기후변화, 산림복구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협력해 진행하는 사업이 있다”며 “북한의 백두대간 복구를 특별히 염두에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함.

- 남포해운사업소, 태양열에너지로 운행하는 새 여객선 건조(8.24, 중앙통신)
- ‘청년절(8.28)’ 즈음 전국 대학생 정보과학기술성과 전시회, 8월 24일 김승두(교육위원장)·전용남(청년동맹위원장, 개막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8.24, 중앙통신·평양방송)
- 국가과학원 조종기계연구소 과학자들, 공업용 로봇들을 개발·도입하는 성과 이룩(8.27, 중앙통신)
- 전국 수산 및 양어부문 과학기술발표회, 8.26~27 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 주최로 국가과학원 수산과학분원에서 진행(8.27, 중앙통신)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평양 공연 록밴드 “북한 주민들 우리 같은 음악 처음 듣는 듯”(8/27, 미국의소리)
 - 서방 록밴드로는 처음으로 최근 평양에서 공연한 슬로베니아 록밴드 라이바흐는 “북한 주민들이 우리 같은 음악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듯 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함.
 - 라이바흐의 이보 살리거는 미국의 음악 전문지 롤링스톤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래도 예의 바르게 노래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치고 공연이 완전히 끝났을 때는 기립박수를 쳤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함.
 - 라이바흐를 대표해 인터뷰에 응한 살리거는 “북한 관객 중 나이가 지긋한 남성은 공연 뒤 ‘이 세상에 이런 음악도 있다는 것을 전에는 알지 못했다’고 단원들에게 말했다”고 전함.
- 북한, 태풍 고니로 사망 40명·이재민 1만여명(8/2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함경북도 나선 시에서 발생한 홍수로 농경지가 침수되고 4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나선 시에서 22일 오전부터 23일 오후까지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려 5천240여 가구가 파손되고 공공건물 99채와 철도구간 51개가 파괴됐다고 전함.

-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토론회-2015 개막식, 8월 25일 태형철(고등교육상)·리국철(김일성종합대학 부총장/개막연설) 등이 참가한 가운데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진행(8.25,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여자축구팀, 8월 26일 ‘2015년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U-19 선수권대회 준결승경기 對중국팀 2:0 승리 및 결승 진출’(8.27, 중앙통신·중앙방송)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IAEA 보고서, “北, 영변에 경수로 배전시설 건설 중인 듯”(8/27, 연합뉴스)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6일 완성한 북핵 문제 보고서에서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경수로의 배전(配電)용으로 보이는 시설을 건설 중이라고 소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IAEA는 직전 보고서를 낸 작년 9월 이후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비를 계속 진행하고, 새로운 건설작업도 개시했다며 북한 핵개발은 “우려해야할 사태”라고 강조함.
 - 북한의 핵 활동과 관련한 이들 움직임은 이미 ‘38노스’ 등 해외 민간 연구기관을 통해 산발적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IAEA 보고서에서 재확인됨으로써 신빙성이 더해짐.

나. 미·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중·북 관계

- 中 환구시보, “열병식 방해세력 있다면 강력 대응할 것”(8/24, 연합뉴스)
 - 中 관영 언론이 북한이 내달 초 예정된 중국의 전승절 행사를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며 이에 강력 대응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냄.
 - 환구시보는 ‘중국은 한반도 분쟁을 주시하되, 결코 불모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국이 중시하고 있는 열병식에 실질적으로 간섭하려 한다면 이런 악의적 태도를 중국으로선 전혀 무관심하게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힘.
 - 그러면서 “북한이나 한국의 어떤 세력, 또는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세력이 도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하고, 이어 “중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도박을 한 세력을 들춰내진 않겠지만 외부에서 충분히 이를 알 수 있을 방식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함.

- 이는 한반도 긴장이 격화돼 박 대통령 참석이 어려워지는 등 열병식이 방해받는 수준에 이를 경우 북한에 대한 원조중단 같은 수단을 쓸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임.
- 中 언론, ‘北 유감표명·재도발 방지 약속’에 주목(8/25, 연합뉴스)
 - 남북 간 긴장해소를 위한 남북 고위급 접촉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소식을 中 언론들도 긴급뉴스, 속보 등으로 신속하게 보도했으며, 북한의 ‘유감표명’에 주목함.
 - 신화망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조선(북한)과 한국은 고위급 회담에서 한국이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고, 조선이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는 등의 6개 내용에 대한 합의를 달성했다”며 “조선이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도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전함.
 - 중국신문망도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한국과 조선은 22일 판문점에서 시작된 고위급 긴급 접촉을 끝냈다”며 “쌍방은 군사대결 및 충돌을 방지하고 관계 발전을 추구하는 원칙적인 문제 등에 대해 진지하게 협상했다.”고 보도함.
- 北, 中 열병식 참관단 파견국가에 포함 안 돼(8/25, 연합뉴스)
 - 내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항일전쟁 승전 70주년 기념 열병식과 관련 북한이 ‘참관단 파견 국가’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中 군당국이 확인함.
 - 中 군당국은 열병식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번 열병식에는 11개 국가가 군대를 파견하고 31개 국가가 참관단을 파견한다.”고 밝히고 관련 명단을 공개했지만 북한은 포함되지 않음.
- 中, “열병식에 박대통령 참석”…北은 최룡해 비서 파견(8/25,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 열병식에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고,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대신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대표로 파견한다고 밝힘.
 - 장밍(張明) 외교부 부부장은 회견에서 “중국을 찾는 외국 지도자들은 모두 9·3 기념대회를 포함한 중요 활동에 참가한다.”며 박 대통령을 포함한 각국 지도자들이 기념대회는 물론 열병식에도 참석한다고 밝혔으나, 청와대와 외교부는 “중국 측과 세부 일정을 협의 중이다.”라며 열병식 참석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함.
 - 장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불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관련국에 초청장을 보냈다.”며 즉답을 피한 뒤 “최룡해 비서가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환영하며 구체적인 준비를 잘할 것”이라고 답변함.

- 北中 국경 中 병력 집결은 대북 경고 목적(8/27, 연합뉴스)
 - 중국이 최근 북한과의 국경 주변에 군 병력을 집결시킨 것과 관련해 북한에 어리석은 군사행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 신호였다는 분석이 나옴.
 - 아시아 정치전문가 도널드 커크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기고문에서 중국이 최근 남북한 간 갈등이 고조되었을 때 북·중 국경 주변에 병력을 배치한 것은 한국전 때처럼 “중국이 침공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2차 한국전쟁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상황에 대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
 - 커크는 “김 제1위원장은 2011년 집권 이후 중국에 온 적 없으며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시 주석으로부터 거부당했다는 보도도 있다.”며 “북한이 중국 지도부와의 관계를 걱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中 국방부, 北中 접경지역 탱크 이동 “조작된 것”(8/27, 연합뉴스)
 - 中 국방부는 탱크부대가 북·중 접경지역으로 이동하는 사진이 인터넷상에 최근 유포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조작이라고 부인함.
 - 中 국방부 대변인 양위권은 기자회견에서 “관련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면서 “접경지역은 전체적으로 안정돼있고 중국 변방부대는 정상적인 경계와 훈련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
 - 그는 중국 탱크부대의 북·중 접경지역 이동이 남북 양측의 긴장관계 때문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함.

- 황준국 본부장, “북중관계 질적변화…中, ‘北도발’ 편들지 않을 것”(8/28, 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9·19공동성명 10주년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핵 문제로 중·북 관계에 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편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그는 “이번 사태는 지난 수년간 진행돼 온 한중관계 및 중북관계의 변화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면서 “천안함, 연평도 도발시와 달리 중국은 (이번에) 과거의 양비론적 입장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공식 반응을 내놨다.”고 평가함.
 - 이는 중국이 과거와 같이 일방적인 북한 편들기에 나서지 않는 중·북 관계의 변화를 배경으로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담은 것으로 보임.

라. 일·북 관계

- 日 외무상, “북한은 도발행위 자제해야”(8/24, 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국회에서 “북한 측은 도발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기시다 외무상은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자민당 오카다 나오키(岡田直樹) 의원의 질의에 “우리나라로서는 북한의 포격 등에 의한 지역의 긴장 고조를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 그는 이어 “이번 남북 접촉(고위급 대화)이 긴장 완화로 연결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로서는 계속 정보의 수집, 분석을 하고 미국, 한국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싶다.”고 덧붙임.

마. 러·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기타

- 美 NGO, 北에 6억 원 상당 의료용품 지원(8/26, 연합뉴스)
 - 美 민간단체 아메리케어스(AmeriCares) 대변인 도나 포스트너는 미국의 소리(VOA)를 통해 오는 10월, 6억 원 상당의 의약품과 구호품 7천 톤을 북한에 지원한다고 밝힘.
 - 물품은 항생제와 심혈관 관련 의약품, 임산부를 위한 비타민제, 유아용품, 겨울용 모자와 장갑 등으로 평양, 평안도, 황해북도의 병원과 보건소 6곳에 전달될 예정임.
 - 한국전쟁 이후 미국 민간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1997년 2천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면서 북한과 인연을 맺은 아메리케어스는 매년 4차례 정도 북한에 의약품과 의료용품, 위생용품을 지원해왔으며, 작년의 경우 3, 4, 6, 10월 총 437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이번이 처음임.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 국무부, “韓 방위공약 확고” 거듭 천명(8/24, 연합뉴스)
 - 美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논평에 남북한이 군사적 긴장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고위급 접촉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한국 방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확고하다”고 거듭 천명함.
 - 가브리엘 프라이스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우리는 주의 깊게 한반도 상황을 관찰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 측과 계속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美, 韓美 해양안보 훈련강화 ‘北도발대처’…잠수함전·수륙양용(8/24, 연합뉴스)
 - 美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발간한 ‘아시아·태평양 안보전략 보고서’에서 “변화하는 동북아 환경을 관리하고 도발에 대처하는 연합전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한국, 일본과 수차례의 정례적 해양안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혀, 미국은 일본-호주에 이어 한국과도 해양안보 훈련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
 - 국방부는 특히 한국과 연계적으로 실시하는 키 리졸브·폴 이글 훈련을 적시하면서 “본래 훈련의 목적은 특수작전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금은 수륙양용 작전과 대(對) 잠수함전 훈련이 포함된다.”며 “이는 한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 해양영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미국이 이처럼 한국과의 해양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양을 이용한 북한의 도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의도라고 군 소식통들이 전했다.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의 해양패권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우방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의 하나로도 해석됨.

- 美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는 대북 군사적 압박 ‘결정판’(8/24, 연합뉴스)
 - 북한의 포격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한미 군 당국이 추진 중인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에 대북 군사적 압박 수위를 결정적으로 높이는 조치가 될 수 있음.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현재 한반도 위기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시점을 탄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한미 양국이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음을 시사함.

-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가 엄중한 의미를 갖는 만큼 한미 양국은 현재 남북 고위급접촉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데, 한미 양국이 이번에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검토할 때도 우리 군은 적극적인 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짐.

■ 美, “기대 이상” 크게 반색…南北 ‘대화무드’ 지지(8/25, 연합뉴스)

-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남북한이 타결한 합의내용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한국 정부와 계속 긴밀히 공조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힘.
-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틀’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한국과의 철저한 공조와 한미 연합 방위자산을 토대로 단호하게 응징한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보냈는데, 다만 미국으로서는 현 국면이 추가적인 상황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해옴.
- 특히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은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상황을 만들고 이는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관여로도 이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어왔는데, 중동지역에 군사력을 집중 투사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동북아에서 또 다른 군사적 개입을 시도할 ‘의지’나 ‘역량’이 부족한 점이 있음.

■ 美, 北 돌출행동에 한반도 전쟁계획 다시 짚다(8/25, 연합뉴스)

- CNN에 따르면 美 국방부는 포격사태로 촉발된 긴장 속에 북한이 시도한 병력 증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이에 따라 북한이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갑작스러운 징후가 감지될 때, 한국을 보호할 군사력 운용 계획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감.
- 美 관리들은 이 같은 병력증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으며, 특히 미국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대북선전 육성기의 가동을 중단하라며 최후통첩과 같은 시한을 제시한 의도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힘.
- CNN방송은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한국과의 합동군사훈련에서 B-52 장거리 전략폭격기의 비행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함.

- 美 언론, “북한 ‘깜짝 사과’ 성과”...“사과 미흡” 지적도(8/25, 연합뉴스)
 -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고위급 접촉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과 관련해 美 언론들은 북한의 ‘깜짝 사과’와 일부 양보에 의미를 부여한 한편, 일부 언론들은 북한의 유감 표명이 우리 측의 요구에는 못 미치며 북한의 ‘도발 각본’이 다시 반복되었다고 평가함.
 -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역사적 대화가 결실을 보고 북한이 깜짝 사과 (Surprise apology)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합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을 사과한 점이며, 북한은 그동안 사과를 한 적이 거의 없는 만큼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함.
 - WSJ는 이번 한반도 상황이 기습 공격 이후 충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침략행위에 대한 대가를 거의 치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전의 대치 국면과 유사하다고 평가하고, 북한 내부에서 이러한 과정이 승리로 여겨지면서 리더십이 공고해진다고 설명함.
 - 뉴욕타임스(NYT)도 이번 합의가 우리 측이 요구한 ‘확실한 사과’에는 못 미친다고 지적하고,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김정은에 대한 북한 사람들의 숭배를 약화시키지 않는다면 ‘도발-협상-양보’로 이어지는 북한 패턴에 다시 휘말리고, 계속 위협 속에서 살아야할 것”이라고 말함.

- 美, “南北 간 합의가 가장 중요...긴장완화 기회 맞아”(8/26, 연합뉴스)
 - 美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북한이 목함지뢰 폭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것을 놓고 해석상의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이 합의했다는 것”이라고 밝힘.
 -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국무부 차원에서 ‘유감표명’과 ‘사과’의 차이를 규정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이 제시한 표현들을 수용할만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긴장을 완화할 기회를 가졌다”고 평가함.
 - 그는 이어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며 “미국은 이번 합의가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함.

- 백악관도 南北합의 환영 논평…“朴대통령 노력지지”(8/26, 연합뉴스)
 - 에릭 슐츠 백악관 수석부대변인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남북한의 전날 합의에 대해 공식 논평함.
 - 슐츠 부대변인은 “미국은 남북한이 타결한 합의내용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끊임없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힘.
 - 슐츠 부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한국 정부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확고하다.”고 강조함.

- 韓美, ‘朴대통령 방중’ 앞두고 이달 말 외교장관회담(8/26, 연합뉴스)
 - 북한의 포격도발 이후 처음으로, 그리고 오는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달 말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외교장관회담을 함.
 -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 대해 “하반기 우리 외교의 전략적 로드맵 추진을 위한 기본 토대로서 한미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동북아 정세의 선순환 흐름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함.
 -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한미동맹에 대한 거듭된 강조가朴대통령의 다음 달 3일 중국 항일승전 기념행사 참석 결정에 따른 한미동맹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 등을 염두에 둔 의식적인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옴.

- 美 국무부, “朴대통령 중국 열병식 참관 결정 존중”(8/27, 연합뉴스)
 - 美 국무부는 26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고 열병식을 참관하기로 한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국무부는 이날 논평에 “행사 참석은 각국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라며 “우리는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힘.
 - 한편, 국무부는 美 정부가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해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대사를 열병식에 보내기로 한 데 대해 “보커스 대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특명전권대사”라며 “전쟁 당시 미국과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치른 희생을 영예롭게 만들고 모든 관련국들의 화해와 친선을 촉진하는 것에 미국이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힘.

- **美 국무부 새 한국과장에 마크 램버트(8/28, 연합뉴스)**
 - 美 국무부 신임 한국과장에 마크 램버트 주(駐) 베트남 미국대사관 정무참사관이 임명됐다고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이 27일(현지시간) 전함.
 - 램버트 신임 과장은 1990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한 이래 중국, 일본, 베트남 등지에서 근무했으며 국무부내 대표적인 중국통(通)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음.

- **美 전문가, “사드배치 주저는 中 신경 건드릴까 우려 때문”(8/28, 연합뉴스)**
 - 美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 연구원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9·19공동성명 10주년 국제학술회의 발제문에서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논란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배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함.
 - 그는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언제 있을지 모를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잠재적인 성공률을 낮추어 줌으로써 전쟁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배치 필요성을 강조함.
 - 그는 또 “한국 정부는 중국의 경제적 협박에 굴복해 자국민을 보호하는 일을 경시해서는 안된다.”면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중국의 강압적 전략은 중국의 동맹국인 북한에만 통한다는 점과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로 인해 한·미가 이에 대응해 방어책을 강구하게 됐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함.
 - 한·미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공식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클링너 연구원의 이날 발언은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 조야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 **윤병세 장관, “차대통령 방미, 韓美동맹 새로운 도약계기 돼야”(8/30,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2015년 미국지역 총영사회의 및 명예(총)영사회의’에서 오는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한미동맹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밝힘.
 - 윤 장관은 30~31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북극 외교장관회의의 참석 및 이를 계기로 한 존 케리 美 국무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시애틀에 들러 총영사회의·명예(총)영사회의(28~30일)에 참석함.
 - 윤 장관이 한미동맹과 대미 공공외교 강화를 강조한 데 이어 앵커리지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는 점에서 최근 박 대통령의 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행사와 열병식 참석에 따른 일각의 ‘중국 경사론’을 불식하기 위한 적극적 행보로 보고 있음.

나. 한·중 관계

- 韓軍, 中 열병식에 군대 파견 안한다(8/24, 연합뉴스)
 - 중국의 항일승전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우리 군은 군대를 파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러한 결정은 한미동맹 뿐만 아니라 ‘항일’을 주제로 한 이번 열병식이 일본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음.
 - 베이징 소식통들은 “중국 열병식에 군대를 파견하기로 한 10여 개 국가 중에 한국군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하고, 또 “한국을 포함해 열병식에 군대를 보내지 않은 국가들은 5명 이내의 (군) 참관단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함.
 - 중국은 열병식 개최를 공식화한 직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75명의 군대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초청 대상에는 한국뿐 아니라 북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김장수 대사, “韓中, 북핵·지역안보 문제도 소통·협력”(8/24, 연합뉴스)
 - 김장수 주중 대사는 한·중 수교 기념일인 이날 인민일보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양국 정부 간, 국민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지고 발전됐다.”며, “한·중 양국이 북핵 및 지역안보 등 문제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면서 필요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밝힘.
 - 김 대사는 신문 3면에 게재된 ‘꿈의 실현을 위해 한 걸음 더’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한중 수교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며 향후 한중관계의 미래는 현재보다 더 밝다고 강조함.
 - 그는 연내에 발효예정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관한 양국간 협의,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 간의 점점 모색 등을 거론한 뒤 “한중관계의 미래는 현재보다 밝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말함.

- 中, “南北 고위급 협상 타결 환영한다.”(8/25, 연합뉴스)
 - 中 정부는 남북 간 긴장해소를 위한 남북 고위급 접촉이 타결된 데 대해 “조선(북한)과 한국이 긴 협상을 거쳐 긴장 국면을 완화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로 하는 일련의 합의를 도출했다.”며 “중국은 이를 환영한다.”고 공식 발표함.
 - 화춘잉 中 외교부 대변인은 또 “조선과 한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화해 협력을 촉진하고 관련 협의가 순조롭게 실행돼 반도(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함께 수호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임.

- 中, 朴대통령 항전승리 열병식 참석 사실상 확인(8/25, 연합뉴스)
 - 朴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열리는 中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활동의 메인 행사 격인 열병식에 참석한다는 점을 中 당국자들이 사실상 확인함.
 - 장밍(張明) 中 외교부 부부장은 국무원 신문관공실에서 열린 열병식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찾는 외국 지도자들은 모두 9·3 기념대회를 포함한 중요활동에 참가한다.”고 말함.
 - 지난 20일 중국 방문 일정을 공식 발표한 朴대통령도 이에 포함된다는 의미로 풀이되며, 귀웨이민(國爲民) 국무원 신문관공실 부주임은 이와 함께 “기념대회는 열병식과 같이 열린다.”며 보충설명을 함.

- 朴대통령 中열병식 참석에 ‘韓美 강철동맹’ 인식 깨졌다(8/26,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내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 전승절 기념행사 열병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한미 동맹이 강철같이 공고하다는 인식이 깨졌다는 관측이 나옴.
 - 명보(明報)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량윈상(梁雲祥) 교수는 “한중 관계는 사실상 북중 관계보다 좋다.”며 “특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후 북중 간 사이가 멀어졌다.”고 말하고, “김 제1위원장의 열병식 참석 여부가 중요하지 않지만, 서방 동맹국의 일원인 한국은 다르다.”고 강조함.
 - 상하이 통지(同濟)대의 추이즈잉(崔志應)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중국과 한국 간 경제 관계가 상호의존적인 현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결국 열병식 참석을 결정했다.”며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군사 안보에 제한된다.”고 주장함.

- 中 전승행사 참가 한국군 대표단, 열병식도 참석키로(8/27, 연합뉴스)
 - 9월 3일 중국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反) 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하는 우리 군 대표단이 열병식에도 참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군 관계자는 “중국 전승 기념행사에 참가하는 우리 군 대표단 3명이 열병식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한 데 따라 대통령을 수행하는 군 대표단도 자연스럽게 참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이번 전승 기념행사에 참가하는 우리 군 대표단은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공군 중장),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 최석운 합참 군사협력과장(해군 대령) 등 3명임.
 - 우리 군 대표단이 중국 전승 기념행사에 처음으로 참가할 뿐만 아니라 열병식에도 참석하는 것은 양국 군의 우의를 다지는 상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정부 고위관계자, “한미관계 기초 위 중국 대북레버리지 활용”(8/28, 연합뉴스)
 - 정부 고위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열병식 참관과 관련해 “한·미간에 긴밀한 협력이 있었다.”며 “한미관계의 굳건한 기초 위에 북한에 대해 중요한 레버리지(지렛대)를 가진 중국과 협력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이 관계자는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남북관계와 한일관계, 한중관계 등 동북아에서 의미 있는 관계진전을 이루는 기초는 한미관계”라면서 이같이 말했으며, 이 같은 언급은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관을 비롯한 한중관계 진전의 중요사항에 대해 미국 정부와 교감을 이뤄나가고 있음을 강조한 것임.
 - 이 관계자는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언어도발, 군사적 문제에 대해 중국이 큰 역할과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나름대로 영향력을 활용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누차 강조 해왔다.”고 소개함.

-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美대사, “韓中 정상회담 때 ‘통일한국’ 국경 논의해야”(8/28, 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냈던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대사는 27일(현지시간) 기고전문 매체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를 통해 차대통령이 다음 달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때 통일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함.
 - 힐 전 대사는 기고전문에서 “차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나 논의할 의제가 꼭 차있겠지만 北 김정은 정권이 보여주는 최악의 리더십을 감안하면 ‘통일한국’과의 궁극적

- 국경문제가 어떻게 될 지에 대해 시간을 내서 대화하는 것이” 좋다고 말함.
- ‘북한의 엔드게임(endgame·최종단계라는 의미)’이라는 제목의 이 기고문에서 힐 전 대사는 "북한이 일정시점에 가면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로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며 한국이 뒤를 이어받을 것"이라고 지적함.
 - 그는 이어 “통일의 과제는 중대하다.”고 전제하고 “통독의 최근 사례가 일정한 지침이 될 수 있으나 한국은 스스로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튼튼한 통일계획은 물론이고 우방과 동맹, 협력의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 <申열병식 D-4> 朴대통령, ‘격량의 외교전’ 향해 시작(8/30, 연합뉴스)

- 朴대통령이 기념행사의 핵심일정으로 중국의 ‘군사굴기’를 상징하는 열병식까지 참석하는 것은 ‘파격’이자 ‘결단’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일본의 부정적 기류 등 적지 않은 외교적 부담에도 주변의 틈바구니에서 외교적 입지를 넓히기 위한 선제적, 주도적 행보에 나선 것임.
- 박 대통령은 다음달 2일 한·중 정상회담과 이튿날 항일승전 기념행사 참석, 9월 미·중 정상회담에 이은 10월16일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공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한중관계 발전을 통한 한반도 정세의 주도적 관리를 꾀할 것으로 전망함.
- 한·미, 한·중 관계의 큰 틀 속에서 중국을 매개로 한 북핵 문제 모멘텀 조성과 남북관계 개선, 한일관계 전기마련 등이 하반기 외교전의 주요 공략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임.

다. 한·일 관계

■ 日 언론, “韓의 대북 강경대응 이면에는 여론·韓美공조”(8/24, 연합뉴스)

- 日 언론은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여론과 한미 공조 태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함.
- 요미우리신문은 남북한 사이의 고위급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계속하는 것을 소개하며 박근혜 정권이 “대폭 양보할 것 같은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24일 보도함.
- 이 신문은 한국 정부가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긴장을 높여 대폭 양보를 요구하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대해 한국 역대 정권이 유효한

- 수단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나 비판이 있다.”고 분석함.
- 한편, 산케이신문은 한국과 미국이 2013년 서명된 ‘한·미 공동 국지도발 작전계획’에 따라 미군이 처음으로 한국군과 북한의 군사 도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한미 공조를 단호한 대응의 배경으로 지목함.

- 아베 총리, ‘韓식민지배 왜 인정안하냐’ 野질의를 ‘동문서답’(8/24, 연합뉴스)
 - 아베 총리는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가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야당 의원의 거듭된 추궁에 ‘동문서답’하거나 담화 원문을 낭독하는 등의 ‘피해가기’로 일관함.
 - 공산당 야마시타 요시키(山下芳生) 의원의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한 사실을 왜 총리 자신의 말로 써 넣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베 총리는 “(지난 전쟁에 대한) 깊은 ‘회오’의 마음과 더불어,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등 담화 내용을 인용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함.
 - 야마시타는 또 일본의 창씨개명 강요, 일본어 사용 강요, 강제징병, 본인 의사에 반(反)한 군위안부 동원 등을 언급한 뒤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한반도 사람들에게 손해와 고통을 줬다는 인식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고, 아베 총리는 “담화에 있는 그대로”라며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고 답함.
- 아베 총리, “南北합의 환영…긴장완화로 연결되길”(8/25, 연합뉴스)
 - 아베 총리는 남북 합의에 대해 “북한이 도발 행동을 자제해 지역의 긴장 완화와 현안의 해결로 연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남북이 고위급 접촉을 통해 충돌을 피하는 합의를 도출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도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미국,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함.
- 아베 총리, 연일 북한위협 거론하며 안보법안 필요성 강조(8/25, 연합뉴스)
 - 아베 총리는 참의원 특별위원회서 북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연일 강조함.
 - 아베 총리는 “탄도 미사일 방어에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불가결하다.”고

밝힌 뒤 “(일본이) 미군 이지스함에 대한 공격을 내버려둔다면 우리나라도 심각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며 집단 자위권을 행사해 미군 함정을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함.

- 그는 안보 법안이 현재 최종 관문인 참의원에 계류 중인 점을 상기시키며 “논의가 익었을 때 체결(표결로 법안을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말하면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결국 결정할 때는 다수결”이라며 야당이 끝까지 법안에 반대할 경우 의석수의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할 뜻을 내비치기도 함.

■ 韓해군-日해상자위대 수색·구조 공동훈련 연내 실시(8/26, 연합뉴스)

-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韓 해군과 日 해상자위대가 수색·구조 공동훈련을 연내에 실시하는데, 양측은 2013년 12월에 이어 약 2년 만에 공동으로 수색·구조 훈련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장소는 동해 또는 동중국해 해상임.
- 지난 5월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오는 10월 18일 자위대 주최로 개최되는 관함식에 미국, 호주, 인도 등의 함선과 더불어 한국 해군 함정이 참가할 예정이며, 한국이 일본 정부 주최로 열리는 자위대 관함식에 참가하는 것은 처음임.
- 이처럼 양국이 한일관계 악화로 정체됐던 방위 교류를 복원하는 배경에는 핵무기 소형화, 탄도 미사일의 사정 연장 등을 추진하는 북한의 위협이 자리하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함.

■ ‘집단지위권 법안에 영역국 동의 조문 부재’, 日국회서 논란(8/26, 연합뉴스)

- 아베 정권이 제3국이 공격받은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때 공격받은 국가(영역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문을 법안에 명시하지 않은데 대해 일본 국회에서 논란이 일음.
- 전날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을 심의하는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무소속 나카니시 겐지(中西健治) 의원은 법안에 공격받은 국가의 동의,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명기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존립 위기 사태’의 요건으로 영역국의 동의나 요청을 명기해야 한다고 밝힘.
- 아베 정권이 영역국 동의나 요청을 집단 자위권 행사의 전제 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유엔 차원의 집단안보 조치 등 공격받은 국가의 요청이나 동기가 필요하지 않은 활동에 참여하는 데 제약이 생길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임.

- **日 언론, “朴대통령, 열병식 참관 결정으로 中 중시 부각”(8/27, 연합뉴스)**
 - 日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3일 중국의 항일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의 핵심 일정인 열병식을 참관기로 한데 대해 “박근혜 정권의 중국 중시 자세가 한층 부각됐다.”고 평가함.
 - 요미우리 신문 인터넷판은 “미국과 일본은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가에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며 “구미 선진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열병식 참관을 보류하는 와중에朴대통령만 돌출하는 형태가 된다.”고 보도함.
 - 마이니치 신문 인터넷판은 “일본과 구미 주요국 정상급 인사들이 열병식 참관을 보류하는 와중에 경제와 북한 문제 등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려는 한국 으로서는 출석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다.”고 적음.

- **日 정부, 독도 자료 열람 포털사이트 개설(8/28, 연합뉴스)**
 - 아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 영토문제담당상은 옛 행정 문서 등 독도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부르는 독도의 명칭) 자료 포털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히고, 독도와 센카쿠 열도 관련 자료 약 200점을 데이터베이스화 했다면서 이날부터 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함.
 - ‘다케시마 자료 포털 사이트’는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 사이트에 링크되어 있으며, 이 사이트 소개 페이지에는 ‘조사·연구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료를 찾는 분들에게 주로 지역 공공기관이 소장 중인 다케시마 관련 자료를 소개하는 사이트’라는 설명이 있음.
 - 이 페이지는 또 “사이트에 게재하는 자료는 정부의 위탁 사업 아래 현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팀이 식자들의 조언을 받아 조사·수집 한 것”이라며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덧붙임.

- **정부, ‘日 독도자료사이트 개설’에 “독도, 대한민국 주권 상징”(8/28, 연합뉴스)**
 - 우리 정부가 일본의 ‘독도 자료 포털사이트’ 개설에 맞서 기존 독도 홈페이지를 보장, 맞대응에 나섰으며, 외교부는 독도 홈페이지에 국문 및 영문으로 ‘독도는 일본 한국침탈의 첫 희생물’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근거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함.
 -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잘 알고 있듯이 침략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결국 한반도 전체가 일본 땅으로 병합됐다.”고 밝히고, 이어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본은 이미

1904년에 이른바 한일의정서와 제1차 한일협약을 강압적으로 체결하여 한국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장악했다.”고 강조함.

- 외교부는 “그 다음해(1905년) 시마네현 정부는 독도를 시네마현의 관할하에 편입했다고 주장했다. 즉 독도는 일본의 한국침탈의 첫 희생물”이라면서 “오늘날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계속되는 부당한 주장을 보며 한국인들은 일본이 이와 같은 침탈의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함.

■ ‘아베 정책 비판’ 日 공산당 위원장 저서 한국어판 발간(8/30, 연합뉴스)

- 日 공산당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의 ‘전쟁이냐 평화냐: 전후 70년의 동북아 평화’라는 제목으로 아베 총리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의 책이 한국어판으로 발간됨.
- 그는 “아베처럼 온갖 분쟁 문제에 오로지 군사적으로만 대응한다면 긴장만 확대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뿐”이라며 “평화헌법 제9조의 정신에 따라 평화적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제창한 ‘동북아시아 평화협력 구상’을 예로 들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다양한 다자 관계를 만들어 평화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동북아시아에서도 평화협력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호소함.

■ 황우여 부총리, “사실 그대로의 역사 받아들여야” - 韓日 교육장관회의(8/30, 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의 교육수장이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교류대회에서 15년 만에 만나 교류와 협력에 뜻을 모음.
- 황 부총리는 인사말에서 “지나간 역사는 앞날을 위하여 교훈을 얻을 때 새롭게 태어난다.”며 “지난 20세기의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고 21세기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역사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사실 그대로의 역사를 균형 있게 잘 받아들이고 객관적인 평가와 그에 대한 반추도 필요하다.”고 말함.
- 황 부총리의 인사말에 대해 일본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일본과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깊은 관계를 맺어왔다.”고 말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미·중 관계

- 美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中 방문(8/25, 연합뉴스)
 - 로버트 킹 美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중 간 정례협회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 고위 관리들과 인권 및 인도주의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그의 이번 방문은 다음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제30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를 앞두고 중국과 북한 인권문제를 사전에 협의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 유엔 인권이사회는 9월14일부터 10월2일까지 열리며 9월21일에는 공식 일정 가운데 하나로 ‘북한인권 패널 토론회’도 개최함.
-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베이징행...美·中, ‘한반도상황’ 논의 주목(8/25, 연합뉴스)
 -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틀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는데, 이번 방중은 다음 달 하순으로 예정된 시진핑 국가주석의 워싱턴 방문을 앞두고 양국 정상회담 의제를 사전 조율하기 위한 것임.
 - 라이스 보좌관은 방중 기간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 중국 외교·안보분야의 고위급 관리들을 만나 양자·지역·국제현안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으며, 특히 최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남북한 군사적 긴장과 공동합의문 발표에 따른 한반도 상황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임.
 - 양측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개선 등에 대한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함.
- 中, 美·호주 말레이와 잇단 군사훈련...“불신 완화 포석”(8/28, 연합뉴스)
 - 中 인민해방군이 지난 27일 미군, 호주군과 합동 군사 훈련에 돌입한 데 이어 다음 달 말레이시아군 등과도 군사 훈련을 하기로 함.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양위쥘(楊宇軍) 中 국방부 대변인은 다음 달 말라카 해협에서 말레이시아군과 합동 군사 훈련을 한다고 밝혔고, 다음 달 20일부터 28일까지 호주군과도 합동훈련을 한다고 전함.

-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외국군과 잇따라 합동 군사 훈련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최근 중국의 ‘보폭 확대’를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주변 국가들의 불신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함.
- 리이스 보좌관, “시 주석 방미가 양국관계 이정표 되기를 희망”(8/29, 연합뉴스)
 - 시 주석이 주석 취임이후 첫 방미를 앞두고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수전 리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함.
 - 리이스 보좌관은 28일 시 주석을 만나 “미국은 시 주석의 방미가 양국 관계에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시 주석은 양국 간 투자협정,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에서 진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또 중국은 일부 민감한 문제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미국과 협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양국이 공통 기반을 확대하고 견해차를 좁혀야 한다고 말함.
 - 리이스 보좌관은 이에 대해 양국이 견해차가 있는 문제를 갖고 있으며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미국은 양국 관계에 있어서 이런 차이를 적절하게 다룰 계획 이라고 말함.
- 美 백악관, “리이스 보좌관, 중국과 북한문제 논의”(8/30, 연합뉴스)
 - 최근 중국을 방문한 수전 리이스 美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29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이 밝혔으나, 리이스 보좌관이 북한 문제에 관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음.
 - 네드 프라이스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리이스 보좌관이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만나 “북한과 이란, 기후변화, 국제 공공보건 같은 여러 사안에 협력을 강화하는 일이 중요하다는데 동의했다.”고 발표함.
 - 백악관은 리이스 보좌관이 이번 방중 때 시 주석을 비롯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의 류허 부위원장, 판창룽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가오후청 상무부장,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다고 덧붙였다.

바. 미·일 관계

- 中 전승절 대신표 확정...中·러 vs. 美·日 구도 확인(8/25, 연합뉴스)
 - 중국이 항일전쟁 및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각국

- 정상들의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이는 9월 3일 ‘전승절’을 계기로 베이징에서 펼쳐질 치열한 정상외교 무대에 올라가는 선수들의 대진표가 확정된 셈임.
- 이번 무대에는 호스트인 시 주석을 비롯해 박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등 30개국 정상급 지도자가 오르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불참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로써 ‘신밀월’ 관계를 구가하는 중국, 러시아와 대중 견제의 공조를 강화하는 미국과 일본의 경쟁 구도가 다시 한 번 확인됨.
- 박대통령은 미국의 동맹국 정상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을 결정, 한-중 관계를 강화하고 향후 복잡한 동북아 정세 속에 외교적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는 복안임.

■ 오바마 대통령-아베 총리 전화통화…“南北 합의 환영”(8/26, 연합뉴스)

-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전화 회담에서 남북한이 긴장 완화에 합의한 것을 환영했다고 일본 정부가 밝힘.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일 정상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40분간 통화한 사실을 이같이 소개하고 두 정상이 “북한 정세에 대해 계속 협력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전함.
- 또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총리가 지난 14일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에 대해 ‘환영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스가 장관이 소개함.

사. 미·러 관계

■ 美, 러시아제 방공미사일 이란 공급설에 우려 표시(8/26, 연합뉴스)

-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이란에 대한 러시아의 방공 미사일 S-300 공급 계약 체결 임박설과 관련하여 쿡 美 국방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여기서(미사일 공급 계약에서) 긍정적 사태 전개를 보지 못한다.”며 이란과 러시아 간 거래에 이의를 제기함.
- 쿡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방부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S-300 미사일이 이란에 배치될 경우에 대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는 해당 지역의 우리 동맹국들의 안전 보장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강조함.
- 이란과 대립하고 있는 이스라엘 등의 안보 우려를 고려해 러시아가 이란에 실제로 미사일을 공급할 경우 미국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란 의미임.

아. 중·일 관계

- 日 해상보안청, 센카쿠 접근 中 어선 대응 전담부대 배치(8/24, 연합뉴스)
 - 日 정부는 센카쿠(다오위다오)열도에 접근하는 中 어선 대응을 전담하는 부대를 새로 배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중국 어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향 전환 능력이 우수한 'PS'(Patrol Vessel Small)라고 불리는 180t형 소형 순시선 9척 정도를 센카쿠 열도 인근에 거점에 투입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3척은 이미 건조가 진행 중이며 2~3년 내에 우선 투입됨.
 - 日 정부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에 접근하는 중국 당국의 선박을 견제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인근 이시가키지마에 대형 순시선 12척과 대원 약 600명 규모로 된 전담 부대 배치를 추진하고 있음.

- 日 정부, “아베 총리 내달 中 방문 안 해” 공식발표(8/24, 연합뉴스)
 - 日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전승절)’ 행사를 전후로 한 아베 총리의 중국 방문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국회 상황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말함.
 - 국회 상황은 내달 27일까지인 정기 국회 회기 안에 참의원에 계류 중인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아베 정권의 구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됨.
 - 아베 총리의 방중 보류 방침에 대해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은 베이징에서 전승절 행사의 일환으로 열릴 열병식이 군사적 색채가 강해 미국이나 유럽 각국 정상이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을 고려해 이들 국가와 보조를 맞추기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함.

- 방중 포기 아베 총리, 지지율 회복에 ‘아쉬울 것 없다.’ 판단했나(8/24, 연합뉴스)
 - 아베 총리가 내달 초 방중을 포기한 것은 9월 말 자민당 총재선거를 앞두고 내각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수’를 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전승절)’ 행사 전후로 검토해온 아베 총리의 방중을 보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스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국회 상황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말하면서, 내달 27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참의원에 계류 중인 ‘집단 자위권 법안’을 처리하기에 시간이 빠듯하다는 것이 공식 설명임.

- 일본은 행사 명칭 등에서 ‘항일’의 성격을 탈색하길 희망했고, 중국은 정상회담에 응하는 대신 역사문제 등에서 아베 총리가 시진핑 주석의 체면을 세워주길 바랐지만 합의가 불발했는데, 그 이면에는 미국과 엇박자를 내 가면서 가야 할 만큼 중·일 정상회담이 절실하지 않다는 아베 총리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주한 中 대사, “전승행사, 日 등 어떤 나라도 겨냥 안 해”(8/24, 연합뉴스)

- 추귀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中 정부가 ‘항일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가 “일본을 포함한 그 어떤 나라를 겨냥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함.
- 추 대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중미래연구원’ 창립 행사에 참석해 축사에서 “중국 정부가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는 목적은 역사를 깊이 되새기고 선열을 기리며 평화를 소중하게 여기는 동시에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라며 이같이 말함.
-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하기로 한 것이 “한국 여야 각계와 주요 언론의 지지를 받았다.”고 언급하며 “중·한(한·중) 우호가 이미 한국 국민의 마음속에 깊게 뿌리내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함.

■ 中 열병식 초청받은 51개국 중 일본·필리핀만 거부(8/26, 연합뉴스)

- 중국이 개최하는 ‘중국 인민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총 51개국 대표의 참석을 요청한 가운데 이중 일본과 필리핀 등 2개국만 거부했다고 환구시보가 보도함.
- 신문은 또 “일본은 서방의 주요 국가들도 고위관리를 파견하지 않기를 희망했다.”면서 서방 주요국의 정상들은 참석하지 않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장관급 대표를 보내기로 했다고 일본을 비꼬고, 이 같은 현상은 서방 각국이 대중(對中)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확고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분석함.
-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치열한 갈등을 빚는 필리핀도 열병식 등 기념행사에 현직 정부 대표를 파견하지 않기로 함.

- 日 정부, “반기문 유엔총장 中 열병식 참석 중립성에 문제”(8/28, 연합뉴스)
 - 日 정부가 베이징에서 9월 3일 열리는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하는 것은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일본 외무성은 뉴욕의 자국 유엔 대표부를 통해 반 총장 측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이는 사실상의 항의로 풀이됨.
 - 일본 외무성 간부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쓸데없이 과거에만 초점을 맞춘 이번 기념행사에 유엔 사무총장이 태연하게 가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라며 “강한 불쾌감을 갖고 있다.”고 말함.

- 반기문, 日 항의에도 ‘中 열병식’ 참석키로(8/29, 연합뉴스)
 - 유엔의 한 외교 소식통은 28일(현지시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日 정부의 항의에도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군사 퍼레이드)에 ‘당초 계획대로’ 참석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 소식통은 “반 총장은 올해 들어 세계 각국에서 열린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관련 행사에 일정이 허락하는 한 참석해왔다.”면서 “같은 성격의 행사를 두고 어떤 나라가 하는 행사에는 참석하고 특정 국가가 여는 경우에는 불참하는 것이 오히려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함.
 - 中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열병식 참석 외빈 59명 명단에 반 총장이 포함됨.

자. 중·러 관계

- 中-러, 동해서 실탄·상륙 훈련 돌입 “美日 견제”(8/24, 연합뉴스)
 - 中 국제재선(國際在線)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가 20일부터 양국 해군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훈련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23일을 기해 동해상에서 본격적인 실전 훈련에 돌입하며, ‘해상연합(Joint Sea)-2015(Ⅱ)’로 명명된 이번 훈련은 대(對)잠수함 공격과 방공 및 합동상륙 훈련 등을 중심으로 이뤄짐.
 - 양국이 해안에서 대규모 상륙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은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영유권 분쟁을 염두에 두고 양국의 군사적 유대를 과시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함.
 - 이번 훈련은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대전) 승리

70주년' 열병식을 앞두고 진행되는 것으로 군사적 동맹 관계를 대폭 격상한 미국·일본에 대한 견제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푸틴 대통령 내달 2~3일 방중...“항일전쟁 승전 기념식 참석”(8/27, 연합뉴스)
 -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의 초청으로 다음달 3일 텐안먼 광장에서 개최되는 중국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크렘린이 공보실이 밝힘.
 -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과 별도의 양자회담도 할 예정이며 이 자리서 양자 관계 발전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크렘린궁은 덧붙임.
 -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과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와 세계 패권국으로의 부상을 노리며 미국에 맞서고 있는 중국은 근년 들어 유례없는 밀월 관계를 이어가고 있음.

차. 일·러 관계

- 러 부총리, 쿠릴 방문 항의 일본인들에 “할복자살 하라”(8/24, 연합뉴스)
 - 러시아 총리가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방문한 것을 두고 양국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부총리가 반발하는 일본인들에게 차라리 하라키리(할복자살)를 하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음.
 -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부총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반발하는 일본인들을 향해 “그들이 진정한 남자라면 전통에 따라 하라키리를 하고 조용해졌을 것”이라며 “지금은 소음만 내고 있다.”고 격하게 반응하였으며, 이는 러시아 정부 인사들이 쿠릴열도를 방문할 때마다 항의하는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을 거친 어조로 비판한 것임.
 - 로고진 부총리의 발언에 대한 일본 측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 정부 고위 인사가 외교적 수사가 아닌 거칠고 자극적인 말로 일본을 비난하고 나서면서 양국 간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임.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 IFRC “북 라선, 홍수로 수십 명 사망”(8/25, 자유아시아방송)
 - 지난 22일과 23일 내린 집중호우로 함경북도 북쪽 라선 특별경제구역에서 적어도 4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5천 200여 가구 즉 1만 1천여 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음.
 - 중국 베이징의 국제적십자사 동아시아지부 대변인은 25일 현재 북한 조선적십자회 함경북도 지부의 초기 현황보고를 바탕으로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주변 학교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고 밝혔음.
 - 피해 현장에서는 조선적십자회 함경북도 지부 재난대응요원과 8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주민들의 대피를 도왔음.
 - 또 150여 채의 가옥이 완전히 파손되고 860여 채의 가옥은 일부 피해를 입어 주민들을 위해 긴급대피소, 의류, 조리기구, 식수 등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대변인은 덧붙였다.
 - 국제적십자사는 조선적십자회 함경북도 지부의 요청에 따라 조선적십자회와 협의 후 함경남도과 평양으로부터 방수천, 가족용 텐트, 조리기구, 위생용품과 수질정화제 등을 피해 지역으로 보냈음.
 - 조선적십자회는 재난대응요원을 추가로 파견해 현장 상황 파악에 나설 계획임.
 - 또 다른 소식통은 홍수로 다리가 무너지면서 지난 23일 폐막된 제5회 라선국제상품전시회 참가자를 포함해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500여 명이 25일 현재 발이 묶여 있다고 전했다.
 - 소식통은 중국 쪽으로 향하는 선봉 원정 세관과 선봉 사이의 다리와 러시아로 향하는 철교가 무너지고 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외국인 참가자들은 현재 사상자가 없이 안전하지만 외부로 향하는 길이 차단돼 이들이 당분간 라선에서 빠져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임.
- 북, 국제사회 지원 수혜 세계 30위(8/26,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올해 계획한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금이 1인당 10달러로 전체 지원을 받는 국가 중 서른 번째 규모라고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지원 통계를 분석하는 영국의 민간단체, ‘개발 이니셔티브’ (Development Initiative)가 밝혔음.

- 이 단체가 최근 공개한 2015국제 인도주의 지원 보고서(Global Humanitarian Assistance Report 2015)를 보면 북한은 시리아, 미얀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예멘, 온두라스, 네팔과 함께 아시아에서 8번째로 국제사회 지원을 많이 받는 나라임.
 -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은 북한이 대규모 홍수 피해를 입은 2012년 이후 점차 줄어드는 모습임.
 -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제이슨 브라간자 수석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 규모가 2012년 약 1억 1천800만 달러에서 2013년 6천300만 달러, 2014년 3천만 달러로 2년 연속 감소했다고 전했다.
 - 이와 함께, 인도주의지원보고서(GHA)는 2000년 대 들어 국제사회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20위권 국가에 북한이 세 번 선정됐다고 밝혔다.
 - 세 번 모두 고난의 행군 여파가 이어진 2000년대 초반 즉, 2001년과 2003년, 그리고 2004년임.
 - 2001년에는 1억 800만 달러의 지원을 받아 전 세계에서 17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았고, 2003년에는 1억 2천500만 달러로 16위, 그리고 2004년에는 1억 4천100만 달러의 국제지원을 받아 수혜규모 14위로 기록됐음.
 - 2000년대 들어 2004년까지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 20위권에 들던 북한이 핵실험을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 한 번도 20위권 안에 들지 못했음.
- “북한 건설노동자 108명 카타르서 강제 추방돼”(8/26, 연합뉴스)
- 카타르의 유명 건설회사인 CDC가 북한 건설노동자 108명 전원을 근로 규정 위반으로 해고한 뒤 강제 추방했음.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6일 카타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CDC가 북한 건설노동자 108명에 대한 해고와 강제 추방을 지난 7월24일 북한 건설회사 사장에게 최종 통보했다”며 “추방 시한은 8월1일 이전”이라고 보도했음.
 - 이에 따라 CDC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은 지난달 26일 35명, 30일 38명, 8월 1일 35명 등 세 차례로 나눠 북한으로 돌아갔음.

- 북, 해외공관에 대북지원 유도 지시(8/27,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최근 외국에 주재하는 해외공관에 “조국(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해외 비정부기구나 민간지원단체 인사들과 폭넓게 접촉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서유럽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은 “북한이 유럽에 파견된 비정부기구 담당일꾼들에게 대북지원을 할 수 있는 유럽 내 민간단체나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도주의 단체들과 폭넓게 교섭하여 공화국을 지원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북한의 이러한 지시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던 21일 이후에 내려진 것으로, 전쟁분위기가 팽팽했던 시기에 걸맞지 않는 지시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 때문에 북한 해외공관에서는 “대북지원금을 모금하라고 평양에서 지시를 내린 것을 보면 이번에도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표시나 같다”며 안도했다고 이 교민은 밝혔다.
 - 이 교민은 “북한이 대북지원금 모금 지시를 내린 것은 나선시 홍수 피해시기와 비슷하다”며 “북한이 홍수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 북한은 지난 26일 조선중앙통신 웹사이트를 통해 이례적으로 태풍 제15호 ‘고니’가 휩쓸고 지나간 나선시내 홍수피해 현장을 찍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2일 4시부터 23일 22시까지 250mm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면서 큰물로 4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살림집은 1천70여동에 5천240여세대가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 북한이 태풍이 할퀴고 지나간 나선시 일대의 무너진 아파트와 유실된 다리, 침수된 농경지 등을 적나라하게 공개한 것은 외부의 지원을 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한국 언론은 보도했다.
 - 함경북도 출신의 한 탈북자는 “북한이 나선지방의 홍수피해만 공개했지만, 현재 함경북도 청진시와 온성군 일대의 북부지역에는 태풍이 지나가면서 주민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북한 소행 강제실종 전 세계 20만 명’(8/29, 미국의소리)
 - 유엔은 지난 2010년 열린 제65차 총회에서 8월30일을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로 지정했다.
 -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말함.

- 특히 강제실종된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권 침해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례로 규정되고 있음.
- 유엔은 이 문제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 북한도 강제실종 문제가 심각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이 1950년 이후 국가정책이란 명목 아래 다른 나라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하고 송환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 강제실종 사태가 초래됐다고 밝혔음.
- 그러면서 이처럼 다른 나라에서 북한으로 납치돼 강제실종된 사람의 수가 어린이를 포함해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음.
- 보고서는 북한에 의한 납치와 강제실종 대부분이 한국전쟁과 1959년에 시작된 재일 조선인 북송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음.
-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또 북한이 196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수 백 명을 납치했고, 1990년대부터는 중국과 레바논,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싱가포르, 태국 등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납치하는데 관여했다고 밝혔음.
- 북한은 납치 행위에 군인들과 정보요원들을 동원했으며, 이런 행위는 특히 최고 지도자 차원에서 승인됐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 그러나 북한은 관련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김명철 참사는 지난해 5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인권예 관한 정례검토 UPR 에서 COI 보고서 내용을 전면 거부한다고 말했음.
-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에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3월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당국을 압박했음.
- 북한 정부는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긴 납치와 강제실종 등 모든 인권 침해에 대해 조만간 답변을 해야만 한다는 것임.
- 이어 다루스만 보고관은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회원국과 시민단체 등 국제사회의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을 제시하면서, 최종 목표는 책임자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9월21일 열릴 예정인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패널 토론회에서도 북한에 의한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임.

2. 북한인권

-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중국 방문(8/25, 연합뉴스)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24~29일(현지시간) 중국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밝혔다.
 - 킹 특사는 양국 간 정례협회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 고위 관리들과 인권 및 인도주의 문제에 대해 논의한 뒤 오는 29일 귀국할 예정이다.
 - 킹 특사의 이번 방문은 다음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제30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를 앞두고 중국과 북한 인권문제를 사전에 협의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 유엔 인권이사회는 9월14일부터 10월2일까지 열리며 9월21일에는 공식 일정 가운데 하나로 '북한인권 패널 토론회'도 개최함.

3. 탈북자

- 유엔, 실종 탈북자 부부 사건 해명 북한에 요청(8/26, 연합뉴스)
 - 유엔 인권이사회가 중국에서 실종된 탈북자 부부 사건에 대해 해명해줄 것을 북한 측에 요청했다고 보도했음.
 -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보고서에서 한국 국적의 한 부부가 지난 2003년 4월 중국 지린(吉林)성에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에게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음.
 - 탈북자인 김철훈씨와 신성심씨 부부는 지난 2002년 한국에 정착해 결혼했으며 이듬해 중국으로 떠난 뒤 연락이 끊겼는데, 실무그룹은 이 사건을 한국과 중국 정부에도 통보했음.
 - 실무그룹은 또 중국 당국에 체포된 북한 주민 4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중국 정부에 요청했음.
 - 1980년 설립된 실무그룹은 실종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단체로부터 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에 통보해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음.

4. 이산가족

- 미 이산가족 "남북가족상봉 포함 희망"(8/25, 자유아시아방송)
 - 재미이산가족상봉위원회 이차희 사무총장은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의원에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는 편지는 보냈다고 말했다.

- 마크 커크 상원 의원은 2007년 미국에 사는 한인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을 다시 만나도록 지원하기 위해 의회에 ‘한인이산가족위원회’를 출범시킨 주역으로 2011년 한국의 외교부와 통일부 장관 앞으로 미국에 사는 한인 이산가족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할 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음.
 - 돌드 하원의원은 이산가족상봉과 관련한 미국과 한국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0월 한국을 방문할 예정임.
 - 이 사무총장은 남북한 고위 당국자의 회담에서 북한이 이례적으로 사과의사를 표명하고 남북대화를 이어가기로 약속한 점에 주목한다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정례화 된다면 미국의 이산가족들이 참여할 기회도 커질 것이라고 희망했음.
 - 이 사무총장은 한인이산가족상봉위원회에 북한의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한인이 수 백 명 수준이라고 밝혔음.
 - 북한에 직계가족을 둔 한인 이산가족이 2000년 때 초반까지 1만 명 이상으로 추산됐지만, 혈육 상봉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눈을 감은 이산가족이 시간이 갈수록 늘면서 현재는 1천 명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이 사무총장은 덧붙였다.
 - 이 사무총장은 이산가족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북한에 있는 직계가족의 생존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 시간을 다투는 문제인 만큼 미국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미국 의회와 정부 그리고 적십자에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북한당국과도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음.
- 이산가족 6만 명 생사 확인 작업 곧 착수(8/27, 연합뉴스)
- 대한적십자사가 이산가족 6만여 명의 생사 확인 작업에 곧 착수함.
 -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70주년 경축사에서 “남북 이산가족 명단 교환을 연내에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임.
 - 한적은 26일 조만간 적십자사 4층 강당에 전화기 100여 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설치시기를 정부 당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음.
 - 여기서 적십자 자원봉사자 등이 전화로 이산가족의 생사를 직접 확인하게 되며, 전화로 확인하기 어려우면 우편 등으로 확인할 예정임.
 - 대상은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자료에 등록된 이산가족 12만 9천698명 중 생존해 있는 6만 6천292명(51.1%)임.
 - 연령별로는 90세 이상 7천896명(11.9%), 80~89세 2만 8천101명(42.4%),

70~79세 1만 8천126명(27.3%), 60~69세 6천874명(10.4%), 50세 이하 5천295명(8%) 등임.

- 다만, 대면 또는 화상 상봉한 이산가족 2천200여 명은 이미 생사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제외됨.

■ 이산가족 화상 상봉 2007년 후 ‘뚝 끊겨’…활성화 필요(8/28, 연합뉴스)

- 남북 이산가족이 화면으로 만나는 화상 상봉이 지난 2007년 이후 뚝 끊겨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 대한적십자사(한적)는 지난 2005년 한적 본사와 8개 지사에 모두 13개의 화상 상봉장을 설치했다고 28일 밝혔음.
- 설치 후 화상 상봉은 2005년 3차례, 2006년 1차례, 2007년 3차례 등 모두 7차례만 시행됐음.
- 화상으로 상봉한 이산가족은 남측이 279명, 북측이 278명에 각각 달하지만, 2007년 이후 화상 상봉은 단 차례도 없음.
- 대면 상봉을 중요시하는 정부 당국과 상봉을 주관하는 한적의 노력 부족 탓으로 여겨짐.
- 특히 화상 상봉은 지방에 사는 이산가족이 금강산 등 거리가 먼 상봉 장소에 직접 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덜어줌.
- 몸이 불편한 이산가족도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생사를 확인,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은 이산가족이 원해 화상 상봉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북한, 다음달 7일 이산가족 실무접촉 개최 동의(8/29, 미국의소리)

- 북한이 다음달 7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자는 한국의 제안에 동의했음.
- 북한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강수린 위원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오늘(29일) 오후 1시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남측에 전달했음.
- 한국 통일부는 “적십자 실무접촉과 관련해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은 앞으로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8일 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안하는 김성주 총재 명의의 통지문을 북측 강 위원장 앞으로 보냈음.

- 남북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에서 열린 고위급 접촉에서 한국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고, 이후에도 상봉 행사를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했음.
- 특히 북한이 한국의 제안에 하루 만에 동의하면서,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 실무접촉이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추석을 지나 10월 중순 쯤 이뤄질 전망이며,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열리는 것임.

5. 납북자

- 특이사항 없음.

6. 국군포로

- 특이사항 없음.

7. 대북지원

- 미 NGO, 북에 올해 첫 의약품 지원(8/25,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민간단체인 아메리카어스(AmeriCares)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오는 10월 북한에 의약품과 구호품 7천 톤이 도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아메리카어스는 이번에 지원되는 지원 물품이 미화로 약 50만 달러 어치라고 설명했다.
 - 이번 지원품은 평양, 황해북도, 그리고 평안도의 6개의 병원과 진료소로 나눠져서 분배될 예정임.
 - 이번에 제공되는 의약품은 주로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환 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아메리카어스는 밝혔음.
 - 이 외에도 임산부를 위한 비타민제, 아기용품, 겨울용 모자와 장갑도 지원됨.
 - 아메리카어스는 매년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에 의약품과 의료용품, 위생용품을 지원해 왔는데, 작년에는 3월, 4월, 8월, 그리고 11월에 걸쳐 43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지원했음.

- 하지만 올해는 이번에 보내는 5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이 처음이라 더 주목됨.
 - 한편, 아메리카어스는 1997년 연이은 홍수와 기근 피해를 입은 북한에 미국의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항공편으로 직접 의약품을 전달했음.
- EU, 북 ‘식량 안보’에 760만 달러 지원(8/27, 자유아시아방송)
 - 유럽연합은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에서 다양한 유럽 국가들의 비정부 단체들을 통해 북한에서 총675만 유로, 즉 760만 달러 상당의 ‘식량 안보 사업’(Food Security Programme)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음.
 - 익명을 요구한 유럽연합의 관리는 지난해 12월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아일랜드 등의 7개 비정부 단체들이 북한에서 ‘식량 안보’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승인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 식량사업을 하는 비정부 단체로는 영국의 세이브 더 칠드런, 프랑스의 프리미어 위장스, 아일랜드의 컨선 와이드, 독일의 유기농 연구소 등으로 알려졌다.
 - 이 비정부 단체들이 집행하고 있는 ‘대북 식량 안보 사업’은 각기 ‘어린이 대상 집중 강화 영양 지원’, ‘채소 재배법 개선 사업’, ‘가축과 곡물 생산 증대 사업’, ‘농촌, 도시 영양 사업’, 그리고 ‘유기농법 전수 사업’ 등으로 다양하며, 이는 앞으로 3-4년 동안 진행될 예정임.
 - 이 중 독일의 유기농업연구소는 올해 4월부터 북한의 농업 생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기 농업과 연계한 친환경 축산농법 체계를 보급하고 있음.
 - 익명을 요구한 유럽연합의 관리는 이어 ‘대북 식량 안보 사업’ 용으로 2013년에는 약 700만 유로, 2014년에는 약 400만 유로가 지원됐다고 밝혀, 북한의 식량난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 이 기구는 특히, 최근 들어 대북 지원 사업의 중점 사안이 농업기술 전수 등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에서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 개선으로 전환됐다고 전했다.
 - EU “대북 수해지원 아직 없어”(8/28, 자유아시아방송)
 - 유럽연합 산하의 ‘인도적 구호위원회’는 북한의 홍수 피해 상황을 설명하면서 “아직 북한으로부터 수해 지원 요청을 받은 바는 없다”고 전했다.
 - 유럽 연합의 한 관계자는 “보통 북한 당국이 홍수가 난 후, 수해 지원 요청을 해 와야 긴급 지원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48시간 내로 북한 북부 또는 북동지역에 곳에 따라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계속적으로 북한의 홍수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유럽연합은 또한 “북한의 북동 지역에서 폭우로 피해가 있었다”면서 “지난 며칠 동안 홍수와 산사태가 계속됐다”며 북한 내 홍수 상황을 전했다.
- 이어 지난 25일에서 26일까지 24시간 내에 신포에서는 218mm, 삼지연에서는 180 mm, 청진에서는 120mm의 폭우가 쏟아졌다면서, 홍수의 피해가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또 유럽연합에 따르면, 8월 26일 현재, 북한에서는 홍수로 인해 40명이 사망하고, 1만 1천명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라선시와 함경도에서만 해도 800채의 가옥이 파손됐음.

- FAO, 북한 전문가 30명 독일서 ‘산림 복구’ 연수(8/29, 미국의소리)
 -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북한 전문가 30여 명을 대상으로 독일에서 ‘산림복구’ 연수를 실시할 계획임.
 - 식량농업기구의 전범권 산림정책관은 이번 연수가 식량농업기구가 한국 정부와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연수에 필요한 자금 7만 달러는 한국 정부가 지원했다고 말했다.
 - 연수는 독일의 에베르스발데 대학에서 9월과 10월, 11월 중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됨.
 - 북한 전문가 20~30여 명은 4개 조로 나뉘어 일주일씩 연수를 받을 예정임.
 - 전범권 산림정책관은 북한 전문가 7명이 1차로 오는 9월 말 독일을 방문한다며, 독일의 발전된 산림 현황을 둘러보고 전문가들로부터 산림 복구 방안 등을 배울 것이라고 말했다.

8. 북한동향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美 인터넷 홈페이지 ‘워싱턴 프리비컨’에 실린 6·25전쟁 당시 많은 민간인들의 피해 글을 거론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떠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세계 최대의 인권유린국’이라고 비난(8.24, 중앙통신/세상을 기만한 위선의 극치)
- 北, ‘악의 제국 미국이 세계의 면전에서 인권재판관으로 행세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함부로

심판하려고 하는 것은 신성한 인권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하며 '세계평화애호 인민들은 미국을 역사의 심판대 위에 끌어내어 준엄한 철추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8.25,중앙통신·민주조선)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